

2019 서울시 공개 및 경력 1회 공무원 사회 (2019. 2.23 시행) 총평

1. 출제 영역

- 1번 사회문화 1단원 자료 수집 방법
- 2번 사회문화 4단원 복지 제도의 유형
- 3번 사회문화 2단원 일탈행위
- 4번 사회문화 2단원 사회조직 (관료제, 탈관료제)
- 5번 사회문화 2단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6번 사회문화 6단원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 (진화론, 순환론)
- 7번 법과정치 4단원 부동산과 등기
- 8번 법과정치 1단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9번 경제 5단원 자본 거래와 환율
- 10번 법과정치 6단원 국제법
- 11번 법과정치 3단원 기본권의 보장
- 12번 법과정치 5단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13번 법과정치 3단원 법률의 제·개정 절차
- 14번 경제 1단원 경제 활동의 주체
- 15번 경제 3단원 외부 효과
- 16번 경제 3단원 가격 탄력성
- 17번 법과정치 3단원 헌법재판소의 권한
- 18번 경제 5단원 국제수지
- 19번 경제 4단원 경제 안정화 정책
- 20번 경제 1단원 경제적 유인

사회문화 6문제, 법과정치 7문제, 경제 7문제

2. 문항 설명

- 1번 - 전형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로 자료 자주 출제되던 주제이나, 문제 푸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이다. 이번 사회 문화 문제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일 듯하다.
- 2번 - 복지 제도의 유형은 매번 출제되는 단골 문제로서 평이하게 출제된 것이고, 사전 예방적,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 복지 유형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별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 3번 - 단골 출제 주제로서 일탈 행위 중 낙인 이론과 그 해결책을 묻는 문제로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다.
- 4번 - 사회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생각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맞추었을 것이다.
- 5번 -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회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을 비교하는 문제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6번 - 보기에서 나타난 이론이 순환론임을 찾는다면 지문에서 순환론의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7번 - 아주 간단한 등기부 관련 사례이다. 등기부의 구성과 기재되는 내용, 임대차의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권의 경우 성립 순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맞추었을 내용이다.
- 8번 - 헌법 조문을 제시하고 이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로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 9번 -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우선 주어진 사례에서 외화(자본)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감소와 증가의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율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환율 상승과 하락의 효과를 정리해야 한다. 풀이를 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문제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다소 고전했을 수도 있을 문제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특정 한 부분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과 환율, 그리고 그 효과까지 묻는 좋은 문제인 듯 하다.
- 10번 - 국제법 중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서 법의 일반 원칙과 구별하면 되는 평이한 문제이다.
- 11번 - 법과 정치에서 그나마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를 보고 사회권이라고 선택해서는 안된다. (가)~(다)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을 물을 만큼 평등권을 찾아야 한다. 선거의 기본 원칙에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모두 평등권을 실현하는 원칙임을 숙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맞추었을 것이다. 또한 사회 복지 제도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이번에 꼭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 12번 -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례이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를 거치거나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지하되,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청구 주체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함에 비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청구 주체는 근로자 개인임을 이번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되지만, 노동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임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 13번 - 법률 개정 절차에 관한 평이한 문제이다. 헌법 개정 절차와 더불어 꼼꼼하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나온 지문 중 대통령이 환부 거부 시 수정 거부나 일부 거부할 수 없고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 14번 - 민간 경제의 흐름에 대한 그림을 주고 각 경제 주체와 그 특징을 찾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쉽게 맞추었을 주제이고, 실수할 만한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 15번 -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던 주제이다. 이번에 정확한 내용과 외부 효과에 대한 4개의 그래프(외부 경제/불경제, 생산/소비 측면)까지 스스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한다.
- 16번 - 경제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이다. 주어진 보기를 통하여 A제품에 대하여 갑국은 비탄력적이고, 을국은 탄력적임을 찾는다면 지문 자체는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므로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 17번 - 헌법 재판소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전체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하여 각 청구 주체가 다른 만큼 기본적으로 이를 정리하고, 각각의 심판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국민이고, 여기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18번 - 간단한 표이지만 갑국의 경상수지만 나타내 놓고 국제 거래를 갑국과 을국의 두 국가로 한정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자칫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경상수지 자료가 나타내는 바를 잘 이해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고, 1번 지문은 최근에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수능 등의 모의고사에서도 자칫 실수하기 쉬운 지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 19번 -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중앙 은행은 통화 정책을 한다는 것을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맞추었을 문제이다.
- 20번 - 의외로 이번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높은 것 같다. 경제적 유인이 그동안 출제되지 않던 내용이어서 소홀하게 다뤄온 수험생이 많은 듯 하다.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경제적 유인의 두 유형을 이해하였다면 어렵지 않았을 문제이다. 특허권은 긍정적 유인이고, 나머지는 부정적 유인임을 알았다면 보기와 관계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3. 총평

사회문화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출제되었던 주요 주제에서 모두 출제되었고, 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평이한 수준이었다. 평소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1번 문제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었다.

법과정치는 문제의 단순함으로 인해 실제 난이도보다 훨씬 쉽게 수험생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근래의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거나 상속 등의 표와 그림의 계산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 문제 지문 또한 단순하고 짧았다. 다만, 법과 정치는 전반적으로 고른 내용이 출제되고, 꼼꼼히 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이번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성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제에서 이번 공무원 사회 만점을 좌우할 문제가 1~2문제 정도 있는 것 같다. 또한 전반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없이 보기에서 내용을 찾아내고 지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문제를 걸려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난이도는 아주 높은 것은 없었지만 다소 시험 시간의 부족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과정치에서 확보한 시간을 경제에 잘 투자하였기를...) 아주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 과목에 취약한 이유가 이론 따로 문제 따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로 인해 특정 주제에 집중되게 공부하는 경향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 나오면 아는 내용인데도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문제 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서의 내용을 반드시 문제화 된 것으로 확인하여 문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예	아니요
(가)	예	A	B
	아니요	C	D

- ① (가)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②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③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④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실험법에 해당한다. 실험법은 A나 C에 들어갈 수 있는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에 해당한다. 반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없다.

③ B는 질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이므로 B에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 수집 방법이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 ④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1단원 자료 수집 방법

【해설】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므로 A와 C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들어갈 수 있고, B와 D는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중의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주어진 설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분류한 뒤 질문에 따른 대답이 적절한지 아니면 모순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④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 것은 면접법에 해당하고 B에는 면접법이 들어갈 수 있다. 그 결과 D는 참여 관찰법이 들어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므로 옳은 지문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은 면접법이다. 면접법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조사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 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4단원 복지 제도의 유형

【해설】

㉠의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하고, ㉡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②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다. 특히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 수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문이 자주 등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에서 나타난다. 특히 공공부조에서 크게 나타난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지만,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③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원 대상이 빈곤층에 한정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④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정답】 ②

구 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목 적	질병, 실업, 사망에 의한 소득 상실의 불안 해소, 예방적 복지, 재해구제	생활보호 (최저 생활보장), 잔여적 복지 ²⁸⁾ , 생활보호(생존권 보장)	사회적 취약 계층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대 상	능력별 부담 (피보험자)	생활 무능력자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종 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보호대상자보호, 의료급여법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비용부담	피보험자(국민), 고용주(가입), 국가	비용 모두를 국가(세금)가 부담	국가 및 민간 부담
가입방식	법에 의해 <u>강제가입</u> (살호부조의 성격)	<u>자발적 가입</u>	비경제적 지원 사회 보장도의 보조적 성격
장 점	근로소득 고취, 국가재정 부담감소	<u>소득 재분배 효과</u>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 지원
단 점	소득재분배 효과 미약, 소득무능력자 (장애인, 노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움	국가 재정 부담, 국민의 조세 부담, 근로와 투자 의욕 상실	소득 재분배 효과 미약 <u>보조적 사회 보장 제도</u>

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보기 1>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2>

-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
- ㄷ.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 ㄹ.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2단원 일탈행위

【해설】

<보기1>의 내용은 일탈 행위자라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더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

ㄷ, ㄹ. 낙인 이론에서는 낙인에 의해 일탈행위가 야기되고, 일탈이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탈행위자나 범죄자로 살아가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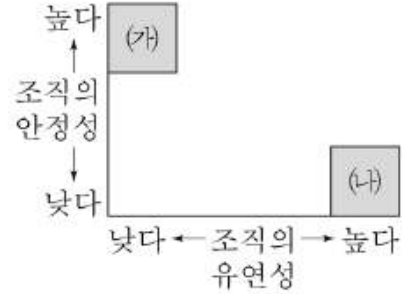
ㄱ. 뒤르캥의 아노미 이론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혼란의 상태를 일탈행위로 본다.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은 뒤르캥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은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과의 상호작용 내지는 학습을 통하여 일탈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의 해결책이 된다.

【정답】 ④

4.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① (가)와 (나)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 ②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 ③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 ④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2단원 사회조직 (관료제, 탈관료제)

【해설】

조직의 안정성은 높지만 유연성은 낮은 사회조직은 (가)관료제이고, 조직의 안정성은 낮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회조직은 (나)탈관료제이다.

① 전문적이고 복잡해진 조직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 형태가 관료제이다. 관료제가 획일적인 조직 문화를 나타내는 등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내포함으로써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동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 탈관료제이다. 즉,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있는 것은 관료제이다.
- ③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은 탈관료제이고, 관료제의 경우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보다 적합한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료제이고, 탈관료제의 경우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가 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구분	관료제	탈관료제
의미	• 근무 경력 우대 • 근무 연수에 따른 임금 (호봉제) • 엄격한 조직 체계, 출근 기간 엄수, 직장 내 근무 • 내부 승진 엄수 • 하향식 지시와 복종	• 능력 우대, 직급 파괴 • 능력에 따른 임금 (연봉제) • 연성화된 조직, 가변 근무제, 자율 복장 • 외부 전문가 영입 • 상향식 의사 결정

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 (나)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지.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 ①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 ②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2단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해설】

(가)는 후보자가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므로 이는 개인은 독자적인 판단이나 사고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고 이를 반영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나)는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 현상의 원인이나 의미를 파악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므로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 ②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③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④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정답】

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 ②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 ③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 ④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6단원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 (진화론, 순환론)

【해설】

<보기>는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며, 진보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고 붕괴되기도 보는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다.

① 순환론은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오답 피하기】

②, ③, ④ 모두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진화론	순환론
공통점	사회 변동은 일정한 양상(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음.	
사회변동의 방향		
관점	•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음. • 사회는 <u>바람직한 방향(진보 또는 발전)</u> 으로 변동함.	• 사회는 '생성 → 성장 → 쇠퇴' 반복함 (진보 or 퇴보) • 사회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와 소멸의 운명을 지님 (<u>운명론적 관점</u>)
전제	• 현재 사회는 과거보다 더 나은 발전된 사회	• 현재 사회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
과정	• 단순 → 미분화 → 복잡 → 분화 (로스트: 원시수렵사회 → 농경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 생성 → 성장 → 쇠퇴 반복 (도인비: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
장점	• 사회의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데 유용함.	•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 (흥망성쇠)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함. •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은 특정한 기간을 주기로 순환함.
비판	• 사회는 퇴보하거나 멸망하기도 함. • 서구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 (문화 계국주의) •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사회 변동의 방향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곤란 •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 • 거시적 차원의 사회 변동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나, 중단기적 사회 변동 설명에는 한계

7. <보기>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A주택의 소유자이다.

- 갑(甲) - 2017년 2월 15일 A주택에 대해 B은행에 3억 원 근저당을 설정함.
- 갑(甲) - 2017년 10월 2일 A주택에 대해 을(乙)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함.
- 을(乙) - 2017년 12월 2일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음.
- 갑(甲) - 2018년 1월 10일 A주택에 대해 C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 ①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 ②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4단원 부동산과 등기

【해설】

A주택에 대해 을(乙)은 갑(甲)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등기부 을(乙)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기재되므로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乙)구에 기재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전입신고 기록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통하여 기록된다.
- ③ A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위의 사례에서 을(乙)의 전세금이 2억 원임을 감안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을(乙)은 전입신고와 입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는 을(乙)이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선순위 물권자인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 ④ B은행은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의 경우 담보권을 가질 뿐이며, 담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정답】 ②

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① 국민주권의 원리 ② 대의제의 원리
- ③ 권력분립의 원리 ④ 지방 자치의 원리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1단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해설】

④ 위의 헌법 조문에서 지방 자치의 원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 자치의 원리와 관련되는 헌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헌법 제1조를 통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헌법 제40조와 제41조를 통하여 대의제의 원리를 타나내고 있다.
- ③ 헌법 제 40조와 제41조, 제66조와 제 101조를 통하여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권력 기관을 상호 분리 독립시켜 권력분립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④

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가)~(라)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보기>

- (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나)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 (다)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라)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 ①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 ②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황 부담을 증가시킨다.
- ③ (다), (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 ④ (가)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저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므로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 된다.

③ (다), (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환율의 하락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져서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④ 위의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답】 ②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5단원 자본 거래와 환율

【해설】

- (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외화 수취 감소 (외화 공급 감소)**
- (나)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 **외화 유출 증가 (외화 수요 증가)**
- (다)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외화 수취 증가 (외화 공급 증가)**
- (라)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 **외화 유출 감소 (외화 수요 감소)**

②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서 거래량은 증가하겠지만, 환율의 상승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황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외화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환율은 상승하고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은 외화의 유입이 증가시켜 다시 환율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환율 하락은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를 가

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보기>

- ㄱ. 신법 우선의 원칙
- ㄴ. 외교관 면책 특권
-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6단원 국제법

【해설】

ㄴ, ㄷ.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ㄱ, ㄹ. 신법 우선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는 국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준거가 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정답】 ③

11. <보기>의 (가)~(다)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 (나)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 (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3단원 기본권의 보장

【해설】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사회권에도 해당하지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통선거는 일반적 평등원리가 선거에서 구체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제도가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정답】 ④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20세)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 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甲)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甲)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①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 ②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5단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해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 정당한 사유 필요, ㉡ 30일 전 해고 계획 예고, ㉢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②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 법원에 소송 가능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도 가능

【오답 피하기】

- ① 사안의 경우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주체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주체이다. 따라서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없다.
-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만약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된다.

【정답】 ②

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발표 학생: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법률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법제 사법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③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④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3단원 법률의 제·개정 절차 【해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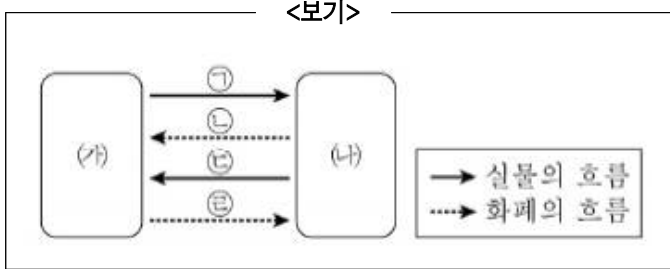
③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를 요하는 것은 헌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이다.
- ②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상정된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거부나 수정 재의를 할 수 없다.

【정답】

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 ㉢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 ① ㉠이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 ② ㉢이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 ③ ㉢이 생산요소이면, ㉡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1단원 경제 활동의 주체

【해설】

③ ㉢이 생산요소이면, (나)는 기업이 되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가 가계이면 가계는 재화를 거래하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므로 ㉡이 재화가 된다.

② (나)가 기업이면,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 서비스의 대가가 된다.

④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가계가 되며,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정답】 ③

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단위: 개, 원)

		<현재 시장 균형>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	시장 균형 생산량	50
최적 가격	100	시장 균형 가격	㉠

- ① ㉠은 100보다 작다.
- ②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 ④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3단원 외부 효과

【해설】

위의 <보기>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는 외부 경제의 생산 측면에 해당한다.

④ 외부 경제의 생산의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많이 들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외부 경제의 생산 측면>

- ① 외부 경제의 생산 측면에서는 위의 그래프와 같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높다. 따라서 ㉠은 100보다 크다.
- ②, ③ 과소 생산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외부 경제의 생산 특면에 해당하고, 이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한다.

【정답】 ④

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보기〉		
A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		
구분	갑(甲)국	을(乙)국
현재 판매량	1,000개	500개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1만원	1만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높다	낮다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다	크다

- ①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것이다.
- ③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 ④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제가 더 많을 것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3단원 가격 탄력성

【해설】

필수재일수록,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인 재화이므로 A제품은 갑(甲)국에서는 비탄력적인 재화이고, 을(乙)국에서는 탄력적인 재화가 된다.

정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탄력적	비탄력적
사치품	생활 필수품
대체제가 있는 상품	대체제가 없는 상품
가격 변동에 대하여 소비자의 대응 기간이 긴 경우	가격 변동에 대하여 소비자의 대응 기간이 짧은 경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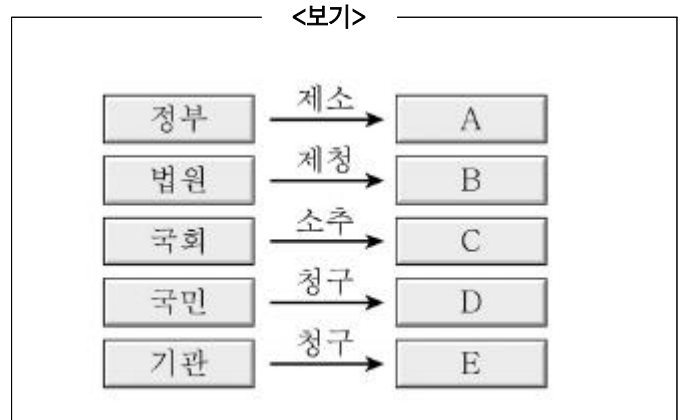
③ A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을(乙)국에 비하여 갑(甲)국에서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나므로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하여 수요량이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A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갑(甲)국에서는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량은 가격 상승분보다 적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② 을(乙)국에서는 A제품에 대하여 탄력적이므로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클 것이다.
- ④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므로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제가 더 적을 것이다.

【정답】 ③

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 ②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3단원 헌법재판소의 권한 【해설】

정리 헌법재판소

권한	청구권자	요건	의결 정족수	효력
위헌법률 심판	각급 법원의 제청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6인 이상의 찬성	원칙 -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 상실 예외 - 형벌 등의 경우 소급효 인정, 단,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탄핵심판	국회의 소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경우	6인 이상의 찬성	공직에서 파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제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6인 이상의 찬성	위헌 정당의 해산 소속 정당위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명문규정 없애 논란은 有)
권한쟁의 심판	기관의 제소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및 내용에 다툼이 생겼을 때	7인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	권한 침해의 결정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쟁의심판결정이 구속력을 가짐
헌법소원 심판	국민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6인 이상의 찬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A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B는 위헌법률 심판, C는 탄핵 심판, D는 헌법소원, E는 권한쟁의 심판이 된다.

①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이 청구권자이고, 헌법소원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탄핵 결정으로 당사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며, 이 때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권한쟁의의 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E는 기관이 청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권한쟁의의 심판이다.

【정답】 ①

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보기>		
	(단위: 억 달러)	
	2017년	2018년
상품수지	30	20
서비스수지	-20	-30
본원소득수지	-15	10
이전소득수지	10	-5

-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②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5단원 국제수지

【해설】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서비스 수지+본원 소득 수지+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된다.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갑(甲)의 2018년 경상수지는 적자이므로 2018년 을(乙)의 경상수지는 흑자일 것이다.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적자이므로 통화량의 감소로 인하여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흑자이므로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이다. 상품 수지는 단순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 상품 수지가 더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의 규모가 감소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② 갑(甲)의 2018년 경상수지는 적자이므로 갑(甲)국의 경우에는 외화의 유입보다는 반출이 클 것이며, 이는 외화의 감소로 인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갑(甲)국의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③ 갑(甲)국의 경우 2017년에는 경상수지가 5억 달러 흑자였으나, 2018년에는 5억 달러 적자이다.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이므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④

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기 2>

- ㄱ.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ㄴ. ㉡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ㄷ. ㉠과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ㄹ.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4단원 경제 안정화 정책

【해설】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종류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주체	수단	종류
재정 정책	정부	정부 지출과 조세	확대 재정, 긴축 재정
금융 정책	중앙은행	통화량이나 이자율 조절	확대 금융, 긴축 금융

<보기 1>에서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때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은 확대 금융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
 ㄷ. 사안의 경우 경기 침체에 해당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대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ㄱ.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에 해당하지만,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가능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 소득이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ex. 세금)을 뺀 값이기 때문이다.
 ㄹ. 순서가 뒤바뀌었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하여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③

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19세기 영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 ① 특허권

② 환경 오염세

③ 쓰레기 종량제

④ 전력 요금 누진제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1단원 경제적 유인

【해설】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를 의미하고, 이는 합리적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보기>의 경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호송을 무사히 마쳐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유인 중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경제적 유인에는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 있다.

구분	내용	사례
긍정적 유인	행위자에게 이익으로 작용 → 해당 행동이 강화됨	금전적 이득(보상), 상금, 장학금, 보조금, 특허권 등
부정적 유인	행위자에게 손해(비용)으로 작용 → 해당 행동이 약화됨	경제적 손실, 벌금, 과태료, 쓰레기 종량제 등

①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술적 창작물(발명)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이는 긍정적 유인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②, ③, ④ 환경 오염세, 쓰레기 종량제, 전력 요금 누진제를 부가함으로써 환경 오염 물질과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전력의 사용량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부정적 유인이 된다.

【정답】 ①